

# 북한의 핵 개발과 조선 식민화 기억의 결합: 핵 민족주의 담론의 형성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이 글에서는 조선 식민화의 기억을 통해서 북한 핵무기의 역사적·전략적 가치가 제시되는 논의를 핵 민족주의로 규정하고, 그러한 핵 민족주의의 형성 배경을 검토했다. 우선, 북한의 핵 민족주의는 김정일 정권의 체제 강화 노력에 따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선전,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핵 보유 선언이라는 2가지 요소가 결합된 2005년 북한의 대내외적 조건하에서 등장했다. 북한의 핵 개발과 조선 식민화 기억이 결합되어 등장한 핵 민족주의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주권과 독립 그리고 새로운 대외 관계를 상징했다. 핵무기를 주권과 독립의 상징으로 제시하는 논의는 2005년 5월에 등장했고, 강대국의 지위 등 새로운 대외 관계로 핵무기의 효과를 강조하는 논의도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의 핵 민족주의가 북한 체제 정당성 유지 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와 관련된 북한의 주장이 북한 체제가 핵개발을 통해 민족의 생존과 발전에 기여했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려 준다.

**주제어** 북한 핵 민족주의, 체제 안전, 핵 보유 선언, 주권, 국제적 위신

## I. 연구 배경

북한의 핵무기는 국내 정치적으로 의미를 갖는 민족주의적 상징의 의미를 언제부터 갖게 되었을까? 군사적 논리에서는 북한에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핵능력을 강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성철, 2014: 126-129). 2003년 9월 북한 최고 인민 회의에서는 핵 억제력 유지·강화 방침을 통해 미국의 핵 선제공격을 막기 위해 핵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포했던 것이다(『로동신문』 2003. 9. 4). 이후 북한에서는 핵의 무기화에 진전을 이룬 결과 핵을 국내 정치적 상징으로도 활용하기 시작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는 김정은의 권위 제고와 체제 결속을 위한 노력에서 핵 개발 조치들이 제시되면서 북한의 핵 개발에는 국내 정치적 목적도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안문석, 2017: 177-178). 이러한 현상은 군사적 논리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북한의 핵 개발이 어느 순간 정치적

수준의 체제 강화 노력과 결합되었음을 의미한다. 탈식민지 신생 체제로서 북한에서는 체제의 정당성을 사회주의만이 아니라 항일 민족주의에서도 찾아왔다. 이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체제 정당성 강화에 기여할 때에는 민족적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표상될 것이다. 사회주의 이념이 체제 정당성의 토대로 기능하기 어렵게 된 탈냉전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미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매체를 통해 뚜렷이 포착된다. 최근 북한에서는 핵 능력 강화로 한민족이 겪어야 했던 설움은 과거지사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원형이 언제, 즉 어떠한 정책적 환경에서 제시되기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함으로써 북한의 핵 민족주의(Nuclear Nationalism)가 핵무기를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논의임을 이해하고자 한다.<sup>1</sup> 이와 더불어, ‘북한의 핵 민족주의 담론에서 핵무기는 무엇의 상징으로 논의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북한 핵 민족주의 형성의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에서 조선 식민화의 역사적 기술은 냉전기와 탈냉전기 북한의 대외 정책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하는 기제의 하나였다. 기본적으로 북한에서는 1947년 말 미국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확립한 이래 구한말 조선의 식민지화가 미국과 일본의 공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규정해 왔다(김재용, 2009: 328-329). 북한의 조선 식민화에 대한 역사적 기술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남연군묘 도굴 사건, 신미양요 등으로부터 시작한다(리나영, 1958: 25-41). 1866년의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해 북한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침입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 본격화될 미국의 조선 시장 진출의 서막이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남연군묘 도굴 사건도 점차 확대되는 미국의 대한반도 진출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한다. 북한의 역사 기술 속에서 이러한 19세기 후반의 사건들은 미국에서 남북 전쟁(1861-1865) 직후 극동 진출을 모색한 결과로 한반도를 극동 진출의 교두보로 주목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당시 미국에서는 북부 중국과 동북 지방에 대한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면서 기항지로서

<sup>1</sup> 서유럽의 근대 국가 등장과 관련된 민족주의의 개념은 ‘민족 국가의 형성, 발전에 기여하는 이념’이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핵 민족주의는 ‘핵무기를 민족의 주권을 보호하고 존엄을 높이는 수단으로 긍정하는 논의’로 규정한다. 진택규(1994), “현대 민족주의의 개념 전개에 대하여,” 『통일문제연구』 6(1), pp. 25-28.

한반도의 중요성에 주목했고, 남북 전쟁 시기 축소된 중국 시장 내에서의 지위를 용이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으로서 한반도에 주목했으며, 향후의 본격적인 아시아 진출을 위해서라도 군사-전략적 기지로서 한반도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20세기 초 한일 합병 조약에 의한 한반도의 식민지 전략 역시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의 결합이라고 강조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에서 재해석한 조선 식민화는 냉전기 반미주의 정책을 정당화해 왔다. 조선의 식민지화를 초래한 세력으로서 그 책임을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에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부여하는 북한의 역사적 기술은 냉전기와 탈냉전기 북한 당국의 반미 정책을 정치적 정당성의 레토릭에 부합하는 것으로 만들어 왔던 것이다. 나아가 반일 정책만이 아니라 반미 정책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원천으로 동원되었다.

특이하게도 북한 민족주의의 내러티브로서 조선 식민화의 기억은 오늘날에 더욱 주목되어야 할 정치, 외교적 필요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현대의 역사적 콘텍스트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북한의 핵 개발이 100년 전 조선의 식민화 기억이라는 콘텍스트에서 전략적 의미를 부여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핵 보유 성명을 발표한 직후 제시한 ‘1905년과 2005’년이라는 기사에서는 핵과 조선 식민화가 결부되었다. 그 기사에서는 을사늑약이 이뤄진 1905년에 조선은 식민지가 되는 비극을 맞보아야 했지만, 2005년의 북한에서는 핵을 갖게 되어 그러한 비애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되었던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규정된 조선 식민화의 기억을 전제로,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에는 한반도의 식민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올해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 직전에도 북한에서는 주요한 비핵화 외교와 관련하여 식민화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언급들을 제시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의 식민화 기억의 활용에 대한 연구는 최근 북한에서 핵을 민족사 속에서 어떻게 의미지으려 하는가에 대한 이해까지도 함께 제공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 II. 기존 연구 고찰 및 연구 방법

### 1.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

조선 왕조에서 연장된 주체로 스스로를 매김하고 조선 식민화 기억을 활용하는 북한의 양상에 대한 일련의 기존 연구는 혈통 민족주의의 도입과 강화에 대한 연구들로서, 북한 민족주의가 체제 정당화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게 한다. 국제주의를 정당화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경제생활의 공통성을 강조하는 스탈린의 민족주의 개념에서 벗어나 혈통 중심의 민족 단위를 중시하는 관점을 북한에서 도입해 간 배경에 대한 탐색이 국내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것이다.

우선, 한성훈(2011)은 1957년 김일성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개념을 제시하게 된 배경으로 1958년 전후 북한의 정치·사회적 체제 변동과 함께 북한의 안보 위기를 꼽았다. 이러한 대내외적 도전 속에서 김일성은 1957년 12월 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민족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고(한성훈, 2011: 158), 북한 사학계에서는 국제 사회주의 운동에 종속되지 않는 북한의 특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 민족의 특수성, 민족의 고유성에 대한 탐구를 발달시켰다. 한성훈은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에서는 민족주의를 유산 계급의 유산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로 파악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고 강조했다(한성훈, 2011: 166). 참고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정치적 기초로 상정한 냉전기 조건을 반영하여 이 시기 북한의 민족주의는 ‘사회주의 애국주의’로 규정되었다.

임채완(1994)과 박용수(2007)는 북한의 민족주의 담론 확대와 1980~1990년대 북한의 체제 위기 간의 관계에 주목했다. 임채완은 사회주의 이념의 약화, 심각한 경제난, 권력 세습 시 정당성의 한계와 같은 1980년대 북한의 체제 위기가 조선 민족 제일주의의 등장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서는 1980년대 중반 스탈린식의 민족 개념을 벗어나 혈통 중심의 민족 개념을 제시했고, 1986년에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한 조선 민족 제일주의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한편 박용수(2007)는 북한 최대의 위기였던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민족 담론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당시 북한에서는 식량난이 미국 등 국제 사회의 책임이라는 외인론을 견지하면서 복고적 담론을 보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광운(2011)은 북한 민족주의 역사학의 전체적 발전 과정을 4가지 시기로 정리하면서 주요 분기점들은 북한의 체제 구축 또는 위기 극복 과정에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민족주의 역사학의 전개 과정을 수용기(1945~1954), 성취기(1955~1974),<sup>2</sup> 발전기(1975~1992), 변용기(1993~)로 구분하고, 중·소 양국에 대한 주체를 김일성이 요구한 1955년, 김일성주의가 공식화된 1974년, 그리고 국제적 고립하에 단군릉 복원 등이 추진된 1993년을 북한 역사학의 주요 분기점으로 주목했다. 특히, 세 번째 분기점인 1993년 이후 북한 민족주의 역사학에 대해 계급 관점을 초월한 민족주의가 전면에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조선 민족 제일주의에 따라 고대사도 새로이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1993년 단군릉 복원과 그 이후 대동강 문명론의 등장 등이 주민들을 단합, 동원하기 위한 민족 정체성 활용의 사례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북한 핵 민족주의는 북한 민족주의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함의가 적용되면서도 북한 민족주의가 핵이라는 테마를 언제, 어떻게 포섭했는가라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물론 북한에서 개별 체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주체’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들은 핵 민족주의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토대이다. 북한 주민들의 민족적 정체성이 미약하다면, 핵 민족주의의 정치적 효과 및 함의도 축소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북한 당국의 체제위기 극복 및 정당성 강화 노력 등 정책적 환경이 민족주의 강화의 배경임을 알려 준다. 즉, 핵 민족주의의 배경에도 체제 정당화 수단으로서 민족주의 선전의 전개에 필요한 동

<sup>2</sup> 특히, 북한 민족주의 역사학에서 두드러지는 성취의 시기는 중소 분쟁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1956년 구소련에서 평화 공존론이 등장하는 시기에 북한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어떻게 북한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었던 것이다(한성훈, 2011: 158). 이러한 배경에서 김일성은 1957년 12월 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민족적 특수성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조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그 이후 북한에서는 근대의 시작을 1866년 반침략 투쟁으로 규정하는 등 반제 민족사관을 성립해 갔다(김광운, 2011: 284). 이후 북한 역사학계에서는 1963년 9월 구소련의 역사학계와 논쟁을 벌이기도 하면서 민족사 연구와 교육을 강화했다(김광운, 2011: 287).

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민족주의 연구는 전반적인 북한 민족주의 연구보다 좁은 초점을 가진다. 북한에서 민족주의를 왜 도입, 강화했느냐가 아니라, 북한의 민족주의 체제 선전이 언제부터, 어떠한 고려에서 핵이라는 테마를 포섭했느냐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기존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 피터 헤이즈(Peter Hayes)는 핵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그의 논문에서 제기하고 있으나, 핵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북한 민족주의의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북한의 2010년대 핵 개발과 대외적 도발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훨씬 공세적인 경향을 핵 민족주의라고 표현했던 것에 불과했다.<sup>3</sup> 참고로 핵 민족주의를 실재하는 연구 대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민족주의의 하위 담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근대 민족주의의 기초는 한민족 최대의 국난이었던 조선 식민화의 역사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 식민화의 역사적 내러티브 등을 통해 핵 개발로 인한 변화를 강조하는 논의가 북한의 핵 민족주의 담론이 될 것이다.

## 2. 핵 정책의 규범적 요인 연구

한편 핵 민족주의 문제에 대한 연구의 의미를 알려 주는 또 다른 기존 연구들은 규범적 요인에 의한 핵 개발에 관한 것이다. 세이건(Scott D. Sagan)은 핵 개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외부 위협을 억제해야 할 안보적 필요, 이해 집단의 이익을 위한 국내의 정치적 필요성만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 차원에서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국제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규범과 공유된 신념도 핵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학적 시각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관습과 상례에 의해 기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서로 모방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해 왔고, 그러한 신제도의 시각에서 규범이 핵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는 논의가 제시되어

<sup>3</sup> Peter Hayes(2011), "North Korean Nuclear Nationalism and the Threat of Nuclear War in Korea," *Pacific Focus* 26(1), pp. 65-89; Peter Hayes(2010), "Nuclear Competition and Korean Nationalism," Nautilus Institute research workshop "Strong connections: Australian-Korea strategic relations-past, present, and future," Seoul, 15-16 June, 2010. 출처: <http://nautilus.org/wp-content/uploads/2012/01/Hayes.pdf>(검색일: 2019. 5. 20).

왔다(Sagan, 1996/97: 75-76). 국기(國旗), 국영 항공, 올림픽 대표 팀 등을 국가에서 갖추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군사 조직과 무기 체계의 구축도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규범이 핵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시각에서, 핵무기와 관련된 규범의 확산과 변화가 연구되어 왔다. 1960년대에는 핵무기 개발이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대국으로서의 국가 정체성과 시대적 규범이 핵 개발에 영향을 준 사례는 프랑스의 핵 개발이다. 프랑스의 핵 개발은 1956년 수에즈 운하 위기를 거치며 프랑스에서 구소련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에 대한 핵 의존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자각한 결과로도 이해되지만(Leffler and Westad, 2010: 312-333), 전후 프랑스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 향유했던 강대국의 지위와 위대함(grandeur)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결과로도 파악된다.<sup>4</sup> 프랑스의 비밀 핵 개발 프로그램은 수에즈 위기 이전인 1954년에 이미 개시되었다는 점에서 안보적 동기 이전에 정체성 요인이 작용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다(Sagan, 1996/97: 77). 프랑스에서는 1958년 알제리 위기로 식민지 회복 등 다른 수단으로는 강대국의 지위를 되찾기가 불가능함을 인식했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드골(Charles De Gaulle) 총리는 핵무기를 국방과 외교 정책 상 '독립성'의 상징으로 규정했고, 그러한 논리에 따라 전방위 억제(tous azimuts)를 핵 교리로 채택했다.

또한 인도는 비동맹 운동이 약화되고 강력 정치의 성격이 커진 탈냉전기 국제 질서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기 위해 핵 개발을 모색한 사례에 해당한다(Malik, 2010). 말릭은 과거 전 세계의 핵 철폐를 주장하던 인도의 대중들이 거의 대부분(91%) 1998년 포카란(Pokharan) II 핵무기 기폭 실험을 지지하게 된 이유로 탈냉전기 인도의 정체성 모색을 꼽았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비동맹 운동의 기반이 잠식됨에 따라, 비동맹 운동의 주도국이었던 인도에서는 국제적 리더십의 또 다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핵이라는 군사적 잠재력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또

<sup>4</sup> 1958년 취임한 드골 대통령은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 강대국은 자신의 운명을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Freedman, 2003: 298).

한 1996년 인도의 CTBT 가입 논쟁으로 인도의 독립적 핵정책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확대되고 핵무기가 인도의 주권과 독립의 상징으로 조명되었다. 인도의 CTBT 가입은 대중들에게는 국제 사회의 외압에 정부에서 굴복하는 것으로 비춰졌고, 대중들은 CTBT 비준을 거부하고 독립적 핵정책을 견지하는 것을 지지했다. 인도 전략가들에게 핵무기는 군사적 무기보다 정치적 수단으로 조명되었다(Tellis, 2001: 280-281).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국제 핵 질서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되었던 것이다. 덧붙여, 인도의 핵무기는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 노력으로 이룬 과학적 성취라는 점에서, 인도의 과학적 역량과 잠재력을 보여 주는 상징으로도 이해되었다(Malik, 2010: 1-30).

이러한 핵 확산 및 비확산과 관련된 정체성과 규범 측면에 대한 연구는 민족주의 등 규범적 요인이 핵 확산에 영향을 준다는 함의를 제시해 주지만, 북한의 핵 민족주의 연구는 반대로 핵개발이 정체성에 어떻게 변화를 주는가를 다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세이건(1997)은 핵과 정체성 간의 상호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정체성이 핵 개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주로 정체성이 핵 정책에 영향을 주는 측면을 제시했다. 프랑스의 핵 개발 사례는 강대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서 핵무기가 추구되었음을 보여 주며, 인도의 사례도 국가 정체성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가 주목되는 현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반면, 북한에 형성된 핵 민족주의는 핵 개발 과정에서 핵이 국내적 정체성 담론에 포섭되는 현상이다. 핵이 정체성에 영향을 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핵 개발의 성과를 통해 약소국에서 더 강력한 국가로 국내적 차원의 정체성 변화를 시도하는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강대국이던 프랑스와 비동맹 운동의 리더이던 인도에게 핵 개발은 새로운 환경 하에서도 과거의 국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되었다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약소국으로 전락한 북한에게 핵무기는 체제생존 능력과 대외적 위상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보다 주목되는 수단인 것이다.<sup>5</sup> 핵이 북

<sup>5</sup> 북한에게 핵의 의미는 프랑스, 인도와 다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 개발 사례는 강대국이거나 국제 사회의 한 축임을 주장하던 나라로서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에 주목한 사례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체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 개발이 강조된 프랑스, 인도와 달리 북한은 상대적으로 약소국이었던 나라가 핵을 가진 사례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북한의 핵 민족주의는 핵 개

한의 민족주의 정체성 담론에 포섭되는 배경으로는 체제 위기 극복 혹은 체제 강화 노력이 주목된다. 이처럼 핵 개발 이후 북한의 민족주의 담론이 변화하는 현상은 민족주의적 요인의 핵 개발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는 기존의 시각들로는 파악하기 곤란하다. 이 글에서 다루려는 대상은 핵 개발에 의한 민족주의의 변화라는 점에서, 북한 핵 정책의 변화 자체보다 북한 당국의 정치적 관심 사항을 바탕으로 핵무기의 역사적·사회적 의미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 3. 연구 방법

이 글에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민족주의 관점의 역사 내러티브 속에서 가치를 부여받는 논의가 언제, 그리고 왜 형성되었는지 검토한다. 핵의 상징적 기능보다는 그러한 상징의 형성에 대한 연구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로동신문』을 통해 북한의 핵 민족주의 내러티브에 주목한다. 향후 이러한 핵 민족주의 담론이 생산자의 의도를 떠나서 자체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까지 보려면 북한 주민들의 수용 여부와 여론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나, 우선 이 글에서는 핵 민족주의에 대한 공적 담론의 형성 자체로 연구대상을 한정한다. 이러한 연구는 특정한 담론이 대내외 요인에 따라 어떻게 강화되어 가는지 비교하는 통시적 연구라기보다는 담론의 형성(formation) 혹은 공론화가 이루어진 특정한 시점에 대한 공시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Lee, 2018: 357-358). 이러한 연구는 담론의 전개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담론의 형성 시점을 더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지도자의 지침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서 민족주의 콘텍스트에서 핵을 어떻게 상징화했는지도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이 글에서는 북핵 2차 위기 이후 『로동신문』의 기사 중 을사늑약 등 조선 식민화의 기억과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함께 다룬 글을 문헌 조사의 방식으로 검토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핵의 의미가 부각될 역사적 콘텍스트로 주목되는 것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략해 가던 구한말의 기억이다. 특히

발에 따른 민족 문제 상황의 변화, 국가적 지위의 변화의 의미가 강조되는 논의가 된다.

북한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공모에 따라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관점에서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 7. 28)과 을사 5조약(1905. 11. 17)의 체결을 조선의 주권을 상실하게 된 기점으로 주목한다.<sup>6</sup> 따라서 이들 사건이 소재로 다뤄진 북한의 기사물들 중에서 핵무기의 가치가 긍정되는 글들을 파악함으로써, 민족 문제 차원에서 핵무기가 역할을 부여받는 핵 민족주의의 담론을 찾았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북한의 조선 식민화 역사 활용 속에 핵 개발이라는 사건이 등장한 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내용을 통해 핵 민족주의의 논리를 이해해볼 수 있다. 아울러, 이 글의 연구 시기는 북한에서 핵을 공개적으로 개발하는 북핵 2차 위기가 태동된 2002년부터 최근인 2018년까지로 했다.

### III. 북한의 핵 민족주의 담론 형성의 정책적 환경

핵무기의 민족적 가치를 강조하는 논의가 2000년대 중반에 형성된 정책적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2002년 7.1 경제 개혁의 효과가 가시화된 2005년 전후 북한 엘리트 내부에서는 체제 위기 극복에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경제 개혁과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체제 이완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정치 사상 재강화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체제 강화의 논의가 부상하던 시점과 겹쳐 미국의 체제 변화 압력이 전개됨으로써 정치 체제 고수

<sup>6</sup> 1905년 7월 28일에 작성된 가쓰라 태프트 밀약은 일본에서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통치를 인정하고 미국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보호권 확립을 긍정한 대화를 담은 각서로서, 가쓰라 다로 총리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William Howard Taft) 미국 육군 장관 간의 비밀 회담의 결과였다(최덕규, 2010: 79). 한편, 1905년 11월 17일의 을사 5조약은 정당한 조약 체결 절차에 따라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일 역사학계 간의 논쟁 대상이 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식에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당시 일본 정부에서 을사늑약 체결 과정에서 협박 내지 강제 수단을 활용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윤대원, 2013: 300-301). 을사늑약은 남북한 모두에서 고립무원 처지의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과거의 비극을 상징한다. 그 외에도 조선 식민화의 기억과 관련된 사건으로는 윤요호 사건(1875), 강화도 조약(1876), 한일 의정서(1904), 정미 조약(1907) 등이 있으나, 북한 언론 매체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언급한 사건은 을사늑약의 강제적 체결이다. 그 언급 수준은 다른 사건에 대한 것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가쓰라-태프트 밀약도 을사늑약 외의 다른 사건들에 비해 『로동신문』에서 다루어지는 빈도가 높은 편이나, 을사늑약 언급에 비교할 수준은 되지 못한다.

의 상징으로 핵이 자리 잡는 현상이 2005년 2월 핵 보유 선언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체제 정당성 강화 정책과 외부의 체제 변화 요구가 맞부딪힌 상황에서—앞서서는 억제, 협상 정책의 수단으로서 성격이 더 컸던—핵무기가 대내적 체제 정당성 재확립 노력 차원에서도 중요한 상징으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의 의도와 신념이 선전기구를 통해 확대된 것이 이후 북한의 핵 민족주의 담론을 이루게 된다.

### 1. 내부적 정치 사상 강화 노력과 조선 식민화 역사의 활용

1990년대 중반 경제 위기를 겪으며 북한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체제 이완을 겪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당시로부터 북한 사회에서는 경제난으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식량난이 한창이던 1996년 말에는 김정일마저 “우리는 지금 식량 사정으로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 열차 칸에는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로 혼잡을 이루고 있다.”라고 언급했다는 것이 당시의 체제 이완을 대변해 주고 있었다(이종석, 2011: 541).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주민들의 직장 이탈은 일반화되었는데, 대다수가 생계를 위해 장마당 혹은 개인 노동에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이영훈, 2005: 31-32). 당시 북한 당국에서는 국제 원조 이외에는 대규모의 기근에 대처할 능력이 없었고, 사회적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검열과 공개 처형 등 공포를 동원했다. 이것은 지도자가 북한 체제를 정치·사회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1990년대 후반 북한 당국의 공식 주장에 대한 주민들의 믿음도 함께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초반 북한 당국에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난의 행군’ 시기 동안에 확대된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각 기업소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경제 관리 개선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것은 북한 당국의 정치적 권위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에서는 2002년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를 시행한 이후 2003년 종합 시장제를 실시했다. 2003년 5월 종합 시장 운영에 관한 내각의 지시는 북한 전역에 걸쳐 약 300개소의 농민 시장을 종합 시장으로 인정했다(임강택, 2009: 98). 이는 개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장마당 상인들이 판매할 수 있

도록 허용했고, 국영 기업소나 협동 단체의 시장 활동도 허용했다(김병로, 2013: 184-185). 이러한 조치들에 따라 ‘고난의 행군’ 시기에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참여했던 개인 노동, 상행위가 합법화됨으로써, 주민들이 수입과 지출 양 측면에서 시장에 안정적으로 의존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북한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의존이나 존경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2005년경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시장을 비사회주의 서식장으로 규정함에 따라 북한 당국에서는 2005년 12월, 2006년 3월 주민들에게 공장, 기업소에 출근하여 개인 노동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으나, 주민들은 개인 기업소 임금이 직장의 10배 이상인 상황에서 당국의 지시에 부응하지 않았던 것이다(이교택 외, 2007: 71-74). 아울러 북한 사회 기강의 이완에 더해져 2000년대 초·중반의 남북 관계 개선도 북한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2005년경 북한 내부에서는 ‘노트텔’ 등 CD 재생 매체가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그와 함께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 보기도 유행했다.<sup>7</sup>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에서도 이념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2005년을 노동당 창건 60주년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위한 방법론에는 사회주의 이념의 재확립 등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 엘리트들 속에서 체제 정당성의 원천을 다져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었다. 경제 관리 개선 조치가 발표된 2002년에도 당국에서는 학습 제강을 통해 ‘부르주아 자유화 바람’이 주민들에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문화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었다. 개혁주의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어 가던 2005년 초에는 체제 정당성의 약화에 대한 당의 우려가 표면화되면서, 당정 회의에서 박봉주 내각 총리와 노동당의 원로 세력 간의 의견 충돌도 빚어졌다(한기범, 2009: 191). 이에 대해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노동당의 입장을 지지했다. 신년 공동 사설 제목에서도 전당, 전군, 전민의 일심단결을 요구하고 정치적 단결과 질서, 사상적 통일을 공동 사설의 첫 번째 과업으로 제시했듯이(『로동신문』 2005. 1. 1), 김정일은 노동당 창건 60주년을 맞는 해에 체제 정당성의 강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

<sup>7</sup> 이 당시 유행한 한국 드라마로는 ‘겨울 연가’(2002 한국 방영), ‘울인’(2003), ‘천국의 계단’(2003~2004), ‘대장금’(2003~2004) 등이 있다(강동완, 2014: 184-185).

있던 것이다.<sup>8</sup> 2005년 1월 9일 조선 노동당 중앙 위원회, 내각 책임 일꾼에 대한 연설에서도 김정일은 그해의 첫 번째 문제로 내부의 정치 사상 강화를 통한 사회주의 제도 수호를 제시했다(조선노동당출판사, 2013: 202). 그에 따라 2005년 5월 경 박봉주는 사실상 실권되고 노동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박남기가 2005년 7월 노동당 계획 재정 부장에 임명되어 대내 정책을 주도하게 된다. 박남기의 임명과 더불어, 체제 정당성 확립을 위해 보수적인 방법론이 동원됨에 따라 전통적인 노력 동원 운동으로서 ‘충성의 100일 전투(2005. 7. 3~10. 10)’도 개시되었다(『연합뉴스』 2005. 12. 15). 이뿐만 아니라 ‘인덕 정치’의 구현을 위한 대사면이 2005년 9월 1일 실시되어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고양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졌다(SBS 2005. 8. 1.).

이러한 북한의 체제 정당성 강화 노력은 북한 정권에서 이룬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민족사적 관점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2005년은 신년 공동 사설에서도 “우리 조국과 혁명 력사에 특기할 경사의 해, 당 창건 60돌과 조국 광복 60돌이 되는 희망찬 새해”로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경제적 안정, 6자 회담의 진행 등 대내외 여건의 호전과 더불어 체제 선전의 확대가 진행되었다. 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는 여러 종의 기념 도서 출간과 미술·사진전이 개최되었으며(『연합뉴스』 2005. 10. 2), 당 창건 60주년인 2005년 10월 10일 당일에는 중앙 보고 대회가 8년 만에 개최되어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참가했고, 군 열병식, 가두 행진, 횃불 행진, 대집단 체제, ‘아리랑’ 예술 공연 등도 연이어 진행되었다. 이러한 체제 선전의 강화는 2005년 1월 초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내부 정치 사상 강화에 따른 조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5년 1월 9일 노동당, 내각 책임 일꾼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의 정치 사상 확립을 위한 교양 사업의 강화를 요청했었던 것이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2005년 1월 9일 연설에서 김정일이 교양 사업 강화의 방향의 하나로 사회주의적 애국 교양

<sup>8</sup> 또한 1999년부터 시작된 경제 사정의 호전이 2005년에도 이어짐에 따라, 김정일 위원장으로서 는 경제적 위기 해결을 위해 허용해 온 체제 이완을 이제는 해결할 시기라는 여유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1999년부터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북한의 경제 성장률(추정)은 1999년 6.1%, 2000년 0.4%, 2001년 3.8%, 2002년 1.2%, 2003년 1.8%, 2004년 2.1%를 기록한 데 이어 2005년에도 3.8%를 달성했다(최용환 외, 2016: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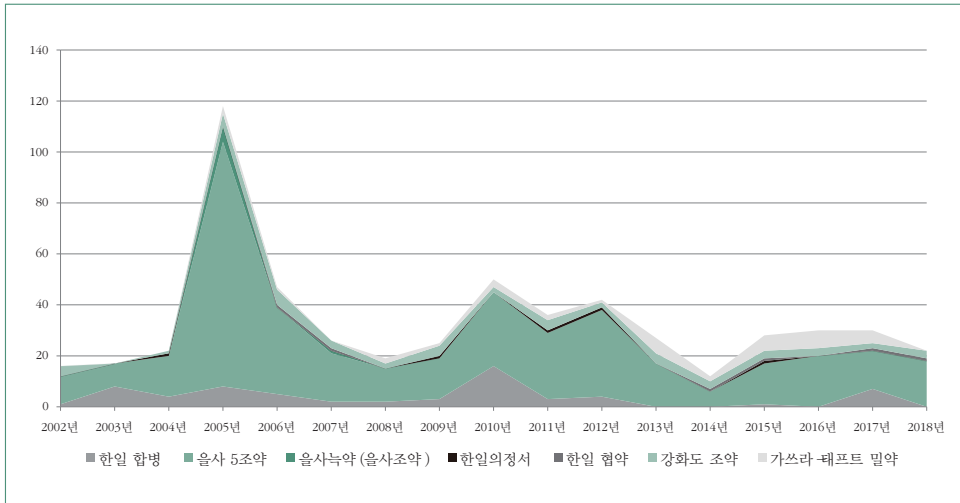


그림 1 조선 식민화 관련 『로동신문』 기사 개수(연도별, 누적)(2002~2018)

을 강조했다는 데 있다. 그는 계급 교양보다 애국 교양을 앞서 언급했으며,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원수들에 대한 증오심이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하며 애국주의 교양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203-204). 이 해는 을사늑약 체결 이후 100년에 해당하는 해로서, 정권 수립 이후의 성과를 강조하는 데 필요한 민족 단위의 역사적 소재도 풍부했다. 무엇보다 김정일 역시 2005년 2월 23일과 4월 14일에 가진 작가, 기자 대상 담화에서 “우리나라에서 1905년에는 망국 조약을 강요당했지만 100년이 지난 2005년에는 불패의 위력을 지닌 최강국의 존엄을 떨치고 있는 데 대하여 응당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조선 식민화의 기억을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할 것을 주문했다(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252). 또한 같은 담화에서 그는 북한 정권 수립 이전까지의 한국사에 대해서도 풍부한 상식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그 이유로 그는 한국사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민족 정서에 합치하는 글을 쓸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작가와 기자들에게 『그림으로 본 조선 역사』라는 100권짜리 전집을 보내 줄 것도 약속했다. 이즈음 김정일이 조선 인민군 지도부와의 담화에서 군대 내부 실무자들에게도 같은 전집을 보내주었다고 밝힌 것은 그가 당시 민족사의 테마를 통해 체제의 정당성

을 강화하는 데 많은 관심을 지녔음을 알려 주는 대목이다(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262). 아래 도표에서 보듯 2005년은 로동신문에서 을사늑약, 가스라-태프트 밀약 등 북한에서 조선의 주권 상실을 결정지은 사건들로 강조하는 소재들이 2002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중 가장 높은 빈도로 다뤄졌던 해였다.<sup>9</sup>

## 2. 미국의 체제 변화 요구와 북한의 핵 보유 선언

2005년에 출범한 부시(George Walker Bush) 행정부 2기는 폭정의 종식(ending tyranny)을 대외 정책의 기조로 제시했다. 민주당의 존 케리(John Forbes Kerry) 후보를 선거인단 기준 34표 차라는 비교적 큰 차이로 이기고 2기 임기를 시작한 부시 대통령은 2005년 2월 2일 연두 교서에서 대외 정책 기조가 민주주의의 확대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유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라크에서는 선거가 곧 실시될 시점에서, 반 테러전 의제에 민주주의의 확대를 포함했다. 장기적으로 평화는 급진주의 등이 배양되는 조건을 제거해야 달성된다면, 민주주의 운동을 지원하고 전 세계의 폭정을 종식시키는 것이 미국의 의도임을 천명한 것이었다(*The Washington Post*, 2005. 2. 2). 연두 교서에서 북한을 폭정으로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보름 전인 2005년 1월 18일 라이스 국무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북한을 포함해 쿠바, 미얀마, 이란, 벨라루스, 짐바브웨 등 6개국을 ‘폭정의 전초 기지’로 지목했다. 라이스(Condoleezza Rice) 당시 국무 장관 지명자는 2기 행정부의 핵심 과제 3가지 중 하나인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대’와 관련해서 현재 개입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 대한 민주주의 확대를 우선시할 것임을 시사했으나, 북한 등 폭정 국가에 대한 민주화 압력이 외교적 수준에서라도 확대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sup>10</sup>

<sup>9</sup> 덧붙여, 개성 공단에서 2005년 초부터 상품을 출시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의 구체적 결실이 가시화되던 시점에서, 북한 당국에서 민족 공동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적 요구, 남북 관계 개선 추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을 것이다. 2005년에는 민족 경제 협력 위원회도 신설되었다.

<sup>10</sup> “Opening Remarks by Secretary of State-Designate Dr. Condoleezza Rice.” <https://2001-2009.state.gov/secretary/rm/2005/40991.htm>(검색일: 2019. 5. 15).

이를 전후하여 미국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을 대외 정책의 가치로 강조하고 있었다. 2004년 7월 21일과 9월 28일에 북한 인권 법안이 미 의회 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했다. 이 북한 인권 법안은 북한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 북한 내 인도적 지원의 모니터링 개선 등을 위해 향후 4년간 매년 2,400만 불의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전수미, 2017: 363-364). 그 결과로 2005년 8월에는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 북한 인권 특사가 임명된다. 한편, 2003년부터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었고, 북한 인권 문제의 진전이 없다는 점 때문에 2005년 11월부터는 EU 25개국의 주도로 유엔 총회 차원의 결의안으로 채택된다(우정, 2005: 115-116).

북한에서는 부시 2기 행정부의 '폭정의 종식' 정책에 반발하여 부시 대통령의 연두 교서로부터 일주일 후인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 보유를 선언했다. 북한에서는 2차 북핵 위기 이후에도 핵 개발을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에서 강조해 왔고,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부시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군사적 수단보다도 외교적 수단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은 명확했다. 그럼에도 북한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반발하여 핵 보유를 선언한 것은 그 배경에 미국의 군사적 제재 가능성 이외의 사안이 고려되었음을 의미했다.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안보 대상인 김정일 중심의 정치 체제를 지킬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핵 보유를 선언한 것이다. 1998년 김정일의 국방 위원장 재추대 시 김영남은 국방 위원장의 임무를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 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국토 방위만이 아니라 체제 방위가 북한 군사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김진환, 2011: 410).

2005년 2월 10일 발표된 핵 보유 성명은 미국의 대북 정책 등을 이유로 핵 보유를 부득이 선언하게 되었음을 강조했다(『로동신문』 2005. 2. 11). 일반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 성명으로 불리는 2005년 2월 10일의 북한 외무성 성명은 부시 대통령의 연두 교서와 라이스 국무 장관의 인사 청문회 발언을 미국에서 "우리와는 절대 공존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책화"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리의 '제도 전복'을 목표로 한 새로운 이념 대결을 선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외무성 성명은 북일 수교 협상 교착도 이후에 언급할 핵 보유 선언의 배경으로 제시했지만, 미국에서 민주화 정책의 대상인 ‘폭압 정권’으로 북한을 상정했다는 것을 6자 회담 불참을 선언할 만한 사건으로 제시하고, “어리석게도 인민에 의해 선출된 우리 정부를 부정”했으니 6자 회담을 하려면 북한 장마당 상인들과 대화하라면서 불만을 표출한 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미국의 변화 요구가 핵 보유 선언의 핵심적인 이유임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성명은 그러한 미국의 북한 민주화 정책을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 조치로 6자 회담 무기한 중단과 핵무기 증산을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2005년 2월 10일의 외무성 성명은 북한에서 이제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음을 공개한 데 큰 의미가 있었다.<sup>11</sup>

핵 보유 성명의 의미는 북한에서도 핵무기를 가진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있다. 물론 북한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고(유성욱, 1996: 84-89),<sup>12</sup>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문으로 동결되었던 핵무기 프로그램도 2002년 말에 재개했으며, 2003년 중 진행한 핵 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2004년까지는 북미 직접 대화를 위해 핵무기 완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2002년 말에는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라는 주장으로 핵 개발 여부에 대해서 모호성을 두었으며, 2003~2004년에는 필요시 핵 능력을 증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처럼 핵 보유 성명 이전 북한에서는 핵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확실한 개발 여부, 핵무기 완성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의 여지를 남겨 두었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도 핵을 가진 나라로 정체성을 제시하기 곤란했다. 반면, 2005년 2월 핵 보유 성명 이후에는 북한

<sup>11</sup> 2005년 2월 10일부 외무성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부시 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고립 압살 책동에 맞서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했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라며 핵 보유를 공식 선언했다.

<sup>12</sup> 북한에서는 1980년대 초반에 착공한 5MW 흑연 감속로를 1987년에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그를 위한 핵연료 공장을 1985년 5월에 착공하여 흑연 감속로 가동 이전에 연료 생산을 개시했고, 재처리 시설도 1989년에 일부 가동되기 시작했다.

에서도 핵 개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주장해 갔다. 이후 북한에서는 2005년 3월 31일 외교부 담화를 통해 6자 회담이 핵 군축 회담(“평등한 자세에서 문제를 푸는 군축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로동신문』 2005. 4. 1), 2012년 4월에는 핵 보유국 지위를 헌법에도 반영했으며(『로동신문』 2012. 4. 14), 핵무기의 사명 등을 담은 핵 보유국법을 제정한 것은 물론(『로동신문』 2013. 4. 2), 2016년 5월의 7차 당 대회를 통해서도 ICBM과 수소탄을 가진 핵 강국이 되었음을 선언했다(『로동신문』 2016. 5. 8).

#### IV. 북한의 핵 민족주의 담론의 형성과 전개

조선 식민화 기억의 활용 고조와 북한의 핵 개발 맥락이 결합된 이러한 배경에서 체제를 고수하고자 하는 의지의 상징으로 핵무기에 주목한 북한에서는 핵무기가 주권 수호의 도구라는 주장, 강대국화의 도구라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북한에서는 우선 핵을 가지게 됨으로써 주권 상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와 거의 같은 시기부터 북한에서는 핵 개발 이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이해가 강대국 사이에 끼인 지역이라는 소극적 인식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핵 민족주의 논의는 각각 주권 수호론, 강대국화론으로 규정해 볼 수 있는데, 이후에도 지속된 핵 개발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 1. 주권 수호론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에서는 핵 보유의 적절성을 제시할 준거점으로 민족주의적 콘텍스트에도 주목했다. 핵무기를 조선의 식민지화라는 민족적 치욕과 연결 짓는 논의가 등장한 시점은 2005년 핵 보유 성명 직후였다. 핵 보유 성명을 통해 핵 국가의 정체성을 공식화하면서 조선 식민화 기억을 통해 핵무기 개발의 적절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2005년 핵 보유성명 이후의 맥락에서 조선 식민화 기억을 통해

한민족의 독립과 존엄의 상징으로 핵무기를 강조했다. 북한에서는 조선 식민화 기억과 핵 개발의 현실을 대비하는 논의 속에 약소국의 비애를 극복할 수단으로 핵무기를 정당화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시각은 로동신문 2005년 5월 29일 자의 ‘1905년과 2005년’ 제하 논설에서 강조되었다(『로동신문』 2005. 5. 29). 100년 전에 한민족이 일본으로부터 을사늑약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승리자의 입장’에서 회고한 이 논설은 핵 보유 선언에 따른 상황의 변화를 강조했다. 1905년과 2005년을 ‘암흑과 광명, 지옥과 천국, 수치와 존엄’으로 대비한 것이다. 아울러 이 논설은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인용함으로써 과거의 비극을 강조했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장지연은 “우리 2,000만 국민이 노예로 되어 살아야 하는가 죽어야 하는가.”라고 통분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한 그러한 망국의 비극을 겪게 된 원인을 국력이 약했던 까닭으로 제시했다. 일본에는 20만 명의 육군 상비군이 있었으나, 조선의 군대는 7,000명에 불과했다는 것이었다. 그와 대비하여 100년 뒤인 2005년 북한의 상황을 ‘을유년의 만세소리’로 상징했다. 100년 전에 을사늑약 체결로 시일야방성대곡이 게재되었다면, 2005년에는 핵 보유 선언으로 북한 내에 만세가 외쳐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논설은 그러한 진전은 김정일의 선군 정치로 가능했던 성과라고 제시하고, 과거 소총도 만들지 못하던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핵무기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술했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조선과 북한을 동일시하는 민족주의적 관점이 이러한 기술행위에 전제되어 있었다.

1905년 일제에게 망국을 강요당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소총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상태였다. … 1903년에 총기 제조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일본의 방해로 착수도 못했다. 그러나 오늘은 마음만 먹으면 그 무엇이든 다 만들어 내는 강위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조국을 건드리는 그 어떤 침략자도 일격에 타승할 수 있는 미사일과 핵무기도 척척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핵·미사일 개발의 성과는 국권상실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해석되었다. 논설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조선 식민지화의 기억을 통해 핵 개발을 정당하고 적절한 정책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이제는 이 땅에서 을사년의 치욕과 망국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될 수 없게 되었다. 지금 세상들은 이라크는 힘이 없어 짓밟혔지만 조선에는 강력한 억제력이 있어 미국도 어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에서 제1차 핵 실험(2006. 10. 9.)을 감행한 이후 발표한 논설들 역시 핵을 독립과 존엄의 상징으로 나타내는 시각을 모두 제시해 갔다. 『로동신문』 2007년 1월 17일 자에 게재된 ‘선군 민족의 창창한 앞날이 보입니다’ 제하의 논설은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선 식민화의 원인은 힘이 없었기 때문임을 강조하며 북한에서는 그러한 교훈에 따라 핵 개발을 하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이 글에서는 지난해의 핵 실험으로 핵 보유국이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신년 공동 사설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고, 이상(理想)을 실현하는 것과 평화를 지키는 것 모두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서구의 침략에 맞선 갑오 농민 전쟁, 을사늑약 이래의 의병 투쟁, 독립군 운동 등 민족의 과거사가 남긴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서 핵보유국이 되었다며, 그은 그러한 교훈에 따른 숙원을 해결한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2009년 5월 2차 핵 실험 이후 대북 제재에 직면한 북한에서는 조선 식민화의 기억을 통해 외압 대 주권의 구도를 더욱 뚜렷이 강조하면서 핵무기를 독립과 존엄의 상징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는 주권에 대한 존중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핵을 강조하는 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6월 20일 자 『로동신문』 상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영원하리’ 제하 논설은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와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를 선언한 2009년 6월 13일 외무성 성명을 배경으로 발표되었다. 제2차 핵 실험에 대한 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가 이날 채택된 것을 암시하면서, 이 글에서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암시했다. 핵무기에 핵 억제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에 따른 결론이라는 것이다. 논설은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고발하면서 헤이그 만국 회의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할복한 이준 열사의 비극 등은 독립이 국제법과 청원의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힘이 약했다면 북한 주민들은 노예 신세가 되었을 것이라며 군사적 실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러한 논의는 핵무기를 독립과 존엄의 상징으로 제

시하는 전형적인 논의였다.

2014년에도 핵의 의미가 강조되었다. 전승철(6·25 전쟁 종전일) 직후 발표된 『로동신문』 2014년 7월 29일 자의 ‘죄악의 력사는 절대로 덮어 버릴 수 없다.’ 제하의 논설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의해 을사늑약, 정미 조약, 한일 합병 조약까지 체결되었다고 하면서 조선 식민화에 대한 미일 양국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어 미일 양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침략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상정하고, 그러한 기도를 핵 보유로 좌절시킬 수 있다고 암시했다. 북한은 이제 과거의 ‘조선’이 아니라며, “핵 보유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면서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당당히 빛내어 가고 있다.”라고 언급했던 것이다.

## 2. 강대국화론

핵 민족주의 논의의 또 다른 갈래인 강대국화론도 앞서 언급한 주권 수호론과 거의 동시에 형성되었다. 주권 수호론이 처음 등장한 논설인 ‘1905년과 2005년’이 제시된 지 얼마 후인 2005년 7월 22일 자 『로동신문』에 게재된 논설 ‘강대한 조국’에서는 핵 개발을 ‘강국 열망’을 실현하는 행위로, 강대국의 상징으로 제시하는 강대국화론이 제기되었다(『로동신문』 2005. 7. 22). 핵 개발을 주권 상실의 위기가 재발하지 않게 할 수단으로 강조한 것을 넘어 강대국 혹은 강성 대국 건설의 성과로 제시한 것이다. 논설은 북한의 역사적 변화를 “망국의 1905년에서, 광복의 1945년으로, 또다시 최강국의 2005년으로!”라는 구호를 통해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북한 당국에서는 핵무기의 개발에 따라 북한에서 패배감과 소극성을 극복하고 더욱 적극적인 목표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강대한 조국’은 최강국이 된 북한을 강조하고, 핵 보유에 대한 애국주의 및 조선 민족 제일주의에 따른 평가를 제시했다. 논설은 김정일이 ‘잘사는 나라이기 전에 강한 나라’여야 한다는 ‘강국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런 강국에 대한 희망은 민족의 피에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민족은 대동강 문화를 창조하고 금속 활자, 천문대 등을 만들어 낸 문명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을사 망국’의 비극을 겪었기에, 강국 열망이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콘텍스트에서 논설은 오늘의 현실이 ‘조선 민족의 가슴속에 세기를 두고 응어리진 약소국의 치욕과

피할 수 없는 속박과 같은 지정학적 숙명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면서, 김정일 체제가 약소국의 비극을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핵 개발을 의미하는 군사력 강화로 북한도 자주 강국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어 논설은 다음과 같이 핵 개발에 따른 안보의 확대와 핵 개발을 위해 흘린 대가를 강조하며, 핵을 통해 국가적 지위를 최상으로 올린 만큼 강성 대국 건설의 다음 목표인 경제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조선의 강대함에 동방과 세계의 평화가 달려 있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동북 아시아의 전란의 역사는 조선이 약할 때 열강들의 각축전에 피가 마를 새 없었고 그로부터 100년 후의 오늘의 현실은 조선이 강하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발전, 번영이 담보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조선 민족의 가슴속에 세기를 두고 응어리진 약소국의 치욕과 피할 수 없는 속박과 같은 지정학적 숙명에 종지부를 찍고 영원한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

우린 벌써 어제 날의 세대가 아니다. 조선의 지위가 달라지고 민족의 무게가 달라졌다. ... 재부를 늘려 번영을 누리게 하는 것도 애국이고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빛내는 것도 애국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빛나는 애국 중의 애국은 나라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일신하고 민족의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 세우고 오늘과 후손 만대를 내다보며 집의 기둥과 궤도를 어떻게 마련해 놓는가 하는 데 있다. ...

나라는 마땅히 강해야 할 뿐 아니라 부가 넘쳐나고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곳이어야 한다. 우리가 천신만고 피눈물도 달게 여기며 오늘과 같은 무적의 성세를 쌓아 놓고 세계 최강의 힘의 억제력을 키운 것은 운명에 대한 그 어떤 불안과 걱정이 없이 마음껏 비약하고 융성 번영하는 낙원을 본때 있게 일떠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2007년 6월 16일에 게재된 논설 ‘선군 정치 - 10대 찬가’는 핵 개발에 따른 강대국으로의 변화를 강조했다. 김정일의 선군 정치를 찬양한 이 글은 모든 나라에서 강국이 되기를 바라며, 강국의 핵심은 강한 군사력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북한에서는 핵 실험으로 비로소 군사력을 가진 강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결과를 ‘세계적 강대국 대열’에 진입한 것으로까지 평가했다. 과거 군사력이 약해 하루아침에 반만년 역사를 잃어야 했던 약소국이었던 배경을 상기시키고, 논설은 북한의 군사력 과시는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에서 핵 보유국임을 헌법에 명기한 때인 2012년 역시 핵 개발에 따른 변화가 강조되는 특색 있는 텍스트가 제시되었다. 『로동신문』 2012년 4월 7일자에 게재된 ‘1912년~2012년의 조선과 세계’ 제하의 기사 역시 지난 100년의 변화, 특히 핵과 로켓의 개발에 따른 변화를 강조했다(『로동신문』 2012. 4. 7). 1912년을 전후하여 본 조선의 주요 사건은 을사 5조약 날조, 정미 7조약 날조, 군대 강제 해산, 한일 합병 조약 날조 등 식민지 전략과정을 보여줬던 반면, 2012년에 본 북한의 주요 사건들은 2010년 태양절의 핵 융합 성공, 2012년 3월 광명성 3호 발사 등으로 국력의 상승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100년 사이에 한반도와 서방 세계의 관계도 구별됨이 강조되었다. 1912년에는 조선 왕조가 식민지로 전략해 가는 가운데 서구의 발전과 자본주의의 팽창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2012년에는 북한에서 핵과 로켓을 갖춰 가는 가운데 서구에서는 금융 위기와 반자본주의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강국, 전략 국가 지위를 달성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2016년에도 핵 개발은 강대국을 향한 정체성 변화의 상징임이 조선 식민화 맥락에서 부각되었다. 2005년 ‘강대한 조국’이라는 글에서도 보였던 논리가 더 구체화, 공식화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2016년도 전승절 이후에 실린 『로동신문』 2016년 7월 29일 자의 ‘조선 반도의 지정학적 숙명론은 이미 과거사로 되었다’라는 논설은 북한의 핵 능력 강화로 한반도와 강대국 정치와의 관계가 변화되었다는 시각을 제시했다(『로동신문』 2016. 7. 29). 우선 이 글에서는 ‘지정학적 숙명론’이 설명되었다. 그러한 시각은 자연 지리적 요인이 국가 정치를 결정한다는 시각으로서 제1차 세계 대전 전후 등장했다는 것이다. 논설은 그러한 지정학적 시각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교차하는 지역에 대한 강대국의 침략을 정당화했다고 언급하며, 지정학적 숙명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북한 역시도 지정학적 중요성에 따라 한반도에 대해 강대국들에서는 침략적 의도를 가진다고 설명해 왔는데, 논설은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 한반도의 분단, 6·25 전쟁의 원인을 지정학적 숙명론의 연장선에서 제시했고, 구한말 서구의 한반도 진출, 청일 전쟁, 명성 황후 시해 사건, 아관 파천, 러일 전쟁,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식민화 과정도 한반도가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강대

국 간의 이권 갈등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시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예로 들었다. 한편 논설은 한반도의 비극을 지정학적 숙명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함을 반문하고, 6·25 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한 것부터 지정학적 숙명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사력 중시의 결과, 북한에서는 핵 강국, ‘핵 전쟁 자체를 억제하는 동방의 사회주의 강국’이 되었다고 언급한 것이다. 아래와 같이, 이 글은 북한도 핵을 가지게 됨에 따라 지정학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지정학적 숙명론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오늘 부디 조선 반도의 지정학적 숙명론에 대해 말한다면 이 땅을 또다시 농락물로 삼으려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우리 행성의 그 어디에 있든 우리의 무자비한 징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리라 하는 것이다. 핵 강국의 전열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에 맞게, 변천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조선 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는 시각도 마땅히 달라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변 대국들의 틈에 끼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다.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주목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주요 전략 지대, 자원 지대로서의 동북 아시아 지역이 주도권 쟁탈을 위한 대국들의 경쟁 무대가 됨으로써 그 북반 위의 노른자위를 타고 앉아 있는 조선 반도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우던 지정학적 위치가 로동당 시대에 와서 복을 안아 오는 지정학적 행운이 된 셈이다.

2019년 2월 말의 하노이 정상 회담을 앞두고서도 ‘김정은 장군 평화의 새 역사를 쓰다’라는 비교적 장문의 논설을 통해서 강대국화론에 해당하는 논의가 다시금 제시되었다(『로동신문』 2019. 2. 13). 이 논설은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패권 경쟁이 과거 식민 지배를 야기하고 오늘날에도 평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며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비유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러한 바탕에서 논설에서는 김정은이 그러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10대 시절부터 ‘지정학적 숙명론’을 단호히 거부한 것은 물론 한반도가 대국들을 움직이는 요충지라고 보고, 강력하고 절대적인 힘을 길러야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진단했다는 것이다. 논설은 그들의 지도자가 그러한 시각에 따라 실제로 미국을 능가하는 실질적인 능력을 추구했으며,

지난해의 연속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한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그를 통해 북한에서는 동북아시아의 강대국 중심 질서를 타파하고 세계 정치 구도를 완전히 재편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논설이 ‘민족의 존엄을 세계의 정상에 올려 세운 공화국의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최상의 정의이고 승리이며 반복의 보검’이라고 언급한 것은 핵, 미사일의 개발이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하는 수단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보여 주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대외 정책의 소극성을 탈피하고 주변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적극적 태도를 견지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의 핵민족주의 논의 내에서 강대국의 상징으로서 핵무기를 제시하는 논의를 통해 정체성의 변화까지 모색하는 현상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V.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통해 ‘북한 핵 민족주의의 원형은 어떠한 정책적 환경 속에서 제시되기 시작했는가?’, ‘북한의 핵 민족주의 담론에서 핵무기는 무엇의 상징으로 논의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첫째로, 핵 민족주의 형성의 배경은 2005년에 겹쳐진 북한의 체제 정당성 재확립 노력과 핵 보유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북한에서는 2005년경 체제 이념을 재정립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7.1 조치 등을 통해 경제 사정을 호전시키는 데에는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약화되어 있었고 외부 사조도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2005년 초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및 광복 60주년을 맞아 체제 이념 재정립의 일환으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선전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고, 북한 정권 수립 이전의 민족사도 체제 선전의 테마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동시에 이 시기 북한은 미국의 체제 변화 요구에 저항할 의지를 2005년 2월 10일 핵 보유 성명을 통해 분명히 했다. 당시 미국의 민주주의 확산 정책은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는 형태가 아니었음에도, 북한에서는 2005년 초 체제 정당성 재정립을 모색하고 있던 배경에서 핵 보유를 통해 미국의 정책에 대해 저항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체제 정당

성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서 민족주의 선전과 핵 보유 성명이 발표되는 사건이 함께 진행되면서, 북한에서는 정권 수립 이전 조선 식민화의 민족사적 테마를 동원해 핵 보유의 의미를 제시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핵 민족주의 담론은 내용 면에서 핵을 주권과 독립의 상징이자 강대국 지위의 상징으로 제시하는 주권 수호론, 강대국화론을 포함한다. 북한에서는 조선 식민화에 대한 상식적 이해를 통해 핵무기를 그러한 국치가 재발하지 않게 하는 수단으로 규정했다. 핵 개발로 “이제는 이 땅에서 을사년의 치욕과 망국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될 수 없게 되었다.”라며, 핵이 을사늑약 등으로 가시화되었던 주권 상실의 위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핵 민족주의 담론에서 핵무기는 강대국화의 수단으로도 규정된다. 북한에서는 핵 개발을 통해 강대국과 같은 최상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강조했다는 의미이다. 이 연장선에서 한반도와 주변 강대국 간의 관계도 변화했음이 부각되었다. 과거에는 주변 강대국들이 패권 경쟁을 위해 한반도를 장악하려던 결과 한반도의 식민지화와 분단이 발생했으나, 핵 개발 이후에는 오히려 북한에서 주변 강대국들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강대국화론은 정치, 군사 강국 건설이 완성된 만큼 경제 강국 건설의 미래 과제에 매진할 것을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메시지로도 활용되었다. 본문의 인용문에서도 언급했듯이, 강대국화를 제시한 2005년에 이미 북한에서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체제가 강해야 할 뿐 아니라 부(富)가 넘쳐야 한다는 논리에서 경제 건설 노력을 함께 독려했던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북한에서 핵 무력 완성 선언 이후 2018년 4월 경제 집중 노선을 채택한 것에서도 실현되었다. 덧붙여 2005년경 동시에 등장한 이러한 핵 민족주의의 두 가지 논의는 최근에는 핵 개발로 북한이 약소국의 운명을 극복하고 강대국이 되었다는 하나의 내러티브로 결합되어 제시되는 측면도 있다. 이는 “오늘의 조선은 한 세기 전 외세의 흥정물로 되던 약소국이 아니며 오늘의 시대는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남의 땅을 강탈하고 지배할 수 있는 시대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오늘 세계 정치 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강대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라는 표현으로 예시된다(『로동신문』 2016. 7. 31). 이러한 담론은 최근 북한에서 강조되고 있는 국가 제일주의의 속에서도 핵심적 주장으로 제시되고 있다.

참고로, 이 글에서는 북한 핵 민족주의의 형성 혹은 공론화의 현상을 중심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핵 민족주의 논의 중 강대국화론은 2016년에 이르러 정책화 수준으로 발전한 것으로 여겨진다. 2005년 이후에도 북한의 핵 국가 지위 주장이 확대되어 왔고 김정은 권력 공고화 과정에서도 체제 정당화 노력이 전개된 결과, 핵 민족주의가 정책적 차원의 논의로 부상한 것이다(이종구·손효종, 2017). 2016년 5월의 7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북한이 핵 강국의 전열에 들어섰다는 전략적 지위 선언을 했고, 그 직후부터 노동당의 대외적 입장을 축약적으로 제시하는 「월간국제정세개관」에 북한이 핵 강국이라는 주장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다(『로동신문』 2016. 6. 30). 그 뒤로 북한이 ‘동방의 핵 강국’, ‘아시아의 로켓 맹주국’으로 부상했다는 논의들이 「월간국제정세개관」에 간헐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로동신문』 2017. 4. 30; 『로동신문』 2017. 7. 31). 이러한 핵 강대국화론의 본격화가 갖는 전략적 의미는 북한에서 핵무기의 효과를 안보 위기 극복만이 아니라 4강 외교 확대 차원에서도 기대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향후 북한은 비핵화 시 안전 보장만이 아니라 충분한 국제적 지위 혹은 발언권의 보장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북한 핵 민족주의의 형성과 발전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갖는 함의 혹은 시사점도 검토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북한의 핵 민족주의는 평양 당국의 체제 유지 노력과 핵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2005년 핵 민족주의의 등장 배경은 북한의 대내적 체제 강화 노력(민족주의 선전의 동원)과 대외적 체제 변화 거부 노력(핵보유 선언)의 결합이라는 콘텍스트였다. 이 점에서, 북한에서 핵무기 없이 대내적으로 체제를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는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관건이다. 두 번째로, 핵 민족주의 담론을 통해 북한의 자기 정체성이 변화했다면, 북한의 핵 포기는 더욱 어려운 정치적 문제가 되었을 수 있다. 만약 핵무기가 대외적 독립과 존엄의 상징이라는 당국의 주장을 북한 대중들이 수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평양 당국의 비핵화 결정 시 그것을 주권과 지위의 훼손으로 보고 심정적으로 정부의 시책을 비판하는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 당국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체제 정당성에 민감한 북한 당국의 비핵화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북한 주민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라는 점에서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비핵화 이행 반대에 적극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북한 당국에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간다면,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담론을 제시하는 북한 체제의 속성상 핵 민족주의 대신 비핵·평화 민족주의를 내놓기 시작할 수도 있다. 끝으로, 북한의 강성 대국 건설 논리에는 핵 개발만이 아니라 경제 발전 노선의 전개가 예비되어 있었으나, 핵 민족주의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체제개혁 노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핵 개발의 상위에는 강성 대국 건설의 방침이 존재했기 때문에 2005년에도 이미 북한 당국에서는 정치, 군사 강국이 되었으므로 경제 강국 건설의 다음 과제로 돌진할 것을 주민들에게 독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핵 무력을 완성했으니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이미 2005년에 등장한 정책 논리로, 2017~2018년에만 보여 준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만 핵 개발을 체제 정당화 수단으로 이용하는 핵 민족주의는 북한의 경제 건설 노력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핵 개발의 성과를 낳은 것으로서 기존 체제의 우월성이 강조됨에 따라 체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고치려는 개혁 노력이 계속 경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이 당장의 핵 개발 성과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만 매몰된다면, 체제개혁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전략적 목표로 상정한 경제 발전에서 더욱 멀어질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국내적 모순과 문제점을 직시하는 태도가 북한 체제의 안정과 장기적 발전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 이제는 경제발전을 하겠다면서도 과거처럼 체제개혁을 미룬다면, 경제적 성과를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어려울 것이다.

투고일: 2019년 5월 21일 | 심사일: 2019년 6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9년 7월 30일

## 참고문헌

- 강동완·박정란. 2014.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 변화 실태 및 북한 주민 의식 조사: 제3국에서의 북한 주민 면접 조사를 중심으로.” 『북한학보』 39(2), 110-151.
- 강혜석. 2017. “정당성의 정치와 북한의 민족 재건설: 주체, 우리 식, 우리 민족 제일주

- 의.” 『다문화사회연구』 10(1), 65-96.
- 김광운. 2011. “북한 민족주의 역사학의 궤적과 환경.” 『한국사연구』 152, 276-306.
- 김병로. 2013.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 구조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16(1), 171-213.
- 김성철. 2014. “북한의 핵역제론: 교리, 전략, 운용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5(4), 121-144.
- 김재웅. 2009. “북한의 논리를 통해 재구성된 미국의 상(1945~1950).” 『한국사학보』 37, 299-344.
- 김진환. 2011. 『북한 위기론: 신화와 냉소를 넘어』, 서울: 선인.
- 리나영. 1958. 『조선 민족 해방 투쟁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박용수. 2007. “1990년대 이후 남·북한 민족주의의 특성: ‘국가적 위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1(1), 5-29.
- 안문석. 2017.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 『한국동북아논총』 82, 173-190.
- 우정. 2005. “북한 인권의 현실성과 문제점.” 『통일전략』 5(2), 113-171.
- 유성욱. 1996. “북한의 핵 정책 동학에 관한 이론적 고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 학위 논문.
- 윤대원. 2013. “『純宗實錄』의 고종 시대 인식과 을사늑약의 외부 대신 직인 ‘강탈’ 문제.” 『규장각』 43, 277-305.
- 이교덕·임순희·조정아·이기동·이영훈. 2007. 『새터민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 이영훈. 2005.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 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44, 25-54.
- 이종석. 2011.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 이종구. 2016. “북한 핵 담론의 당론화 과정과 당론 강화 동학.”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학위논문.
- 이종구·손효중. 2017.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 강국 주장 본격화와 함의.” 『주간국방논단』 1692호.
- 임강택. 2009. 『북한 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 임채완. 1994. “북한 민족주의 이론과 그 변화 추이.” 『정신문화연구』 17(2), 37-52.
- 전수미. 2017. “북한 인권법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17(4), 359-381.
-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김정일 선집 2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진덕규. 1994. “현대 민족주의의 개념 전개에 대하여.” 『통일문제연구』 6(1), 9-38.
- 최덕규. 2010. “‘가쓰라-태프트 협정’에 대한 러시아와 한국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서술 분석.” 『사회과학교육』 49(4), 67-83.

- 최용환·김연호·김소연. 2016. 『북한 사회의 시장화 현황과 전망』. 경기: 경기연구원.
- 한기범. 2009.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성훈. 2011. “북한 민족주의 형성과 반미 애국주의 교양.” 『한국근현대사연구』 56, 135-172.
- 한재현. 2014. “북한의 핵 정치에 관한 시론.” 『인문사회』 215(2), 65-78.
- Cha, Victor D. 2002.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dges, Shields, or Sword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7(2), 209-230.
- Freedman, Lawrence. 2003.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Third Edi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Garnett, Sherman W. 1995. “Ukraine’s Decision to Join the NPT.” *Arms Control Today* 25(1).
- Heyes, Peter. 2011. “North Korean Nuclear Nationalism and the Threat of Nuclear War in Korea.” *Pacific Focus* 26(1), 65-89.
- Lee, Choongkoo. 2018. “The Birth and Revival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Policy for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0(3), 353-375.
- Leffler, Melvyn P. and Odd Arne Westad, eds. 2010.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ume I Origi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lik, Priyanjali. 2010. *India’s Nuclear Debate: Exceptionalism and the Bomb(War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 South Asia)*. New Delhi: Routledge.
- Potter, William C. 1995. “The Politics of Nuclear Renunciation: The Case of Belarus, Kazakhstan, and Ukraine.” Henry L. Stimson Center, *Occasional Paper* No. 22.
- Sagan, Scott D. 1996/97.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21(3), 54-86.
- Tellis, Ashely. 2001. *India’s Emerging Nuclear Posture*.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연론자료〉

- 김수진. 2016.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 높아가는 반미기운.” 『로동신문』(6월 30일).
- 김수진. 2017. “력사의 반동들은 고립과 파멸을 면치 못한다.” 『로동신문』(7월 31일).

- 동태관. 2005. “강대한 조국.” 『로동신문』(7월 22일).
- 로동신문. 20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 조미사이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이 취한 대외적 조치들을 승인함에 대하여.” 『로동신문』(9월 4일),
- 로동신문. 2005.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로동신문』(1월 1일).
- 로동신문. 20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 『로동신문』(2월 11일).
- 로동신문. 20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로동신문』(4월 1일).
- 로동신문. 2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한 보고.” 『로동신문』(4월 14일).
- 로동신문. 2013.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로동신문』(4월 2일).
- 로동신문. 2016.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김정은.” 『로동신문』(5월 8일).
- 론평원. 2016.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숙명론은 이미 과거사로 되었다.” 『로동신문』(7월 29일).
- 박예경. 2016. “미일공모결탁의 산물 〈가쓰라-타프트협정〉.” 『로동신문』(7월 31일).
- 안철권. 2017. “강위력한 자위력은 평화수호의 근본담보.” 『로동신문』(4월 30일).
- 연합뉴스. 2005. “北 당창건 60돌 기념도서 쏟아져.” 『연합뉴스』(10월 2일).
- 오진서. 2019. “김정은 장군 평화의 새 역사를 쓰다.” 『로동신문』(2월 13일).
- The Washington Post. 2005. “Text of President Bush's 2005 State of the Union Address.” *The Washington Post* (Feb. 2).

## Abstract

## The Combina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and the Memories of Colonia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ormation of Nuclear Nationalism in North Korea

Choongkoo Lee Korea Institute of Defense Analyses

This article defines nuclear nationalism as the discourses that explained the historical and strategic value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rough colonization memor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such nuclear nationalism. North Korea's nuclear nationalism came under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of North Korea in 2005 when socialist patriotism was promoted to strengthen the legitimacy of the Kim Jong Il system and nuclear declaration was announced. In the discourses of nuclear nationalism,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symbolized sovereignty, independence, and new external relations as a nuclear power. Statements that presented nuclear weapons as a symbol of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appeared in May 2005, and those that emphasized the effects of nuclear weapons on new external relations, such as the status of a great power, appeared in July 2005. These findings suggest that nuclear nationalism in North Korea is closely related to the efforts to maintain the legitimacy of the North Korean system and consists of contents to achieve those goals.

**Keywords** | North Korean Nuclear Nationalism, Regime Security, Nuclear Declaration, Sovereignty, International Prestige